

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의 주요 내용

건국대학교 KU글로벌혁신대학/부교수
권용수

1. 개요

일본에서는 2025년 11월 21일 2026년 지식재산전략본부 산하에 「구상위원회」(構想委員会)를 설치하고, 202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하였다.¹⁾ 검토 시에는 구상위원회에 설치된 「새로운 쿨재팬 전략 워킹그룹」(新たなクールジャパン戦略ワーキンググループ), 「콘텐츠 전략 워킹그룹」(コンテンツ戦略ワーキンググループ) 및 「국제표준전략부회」(国際標準戦略部会)의 논의뿐 아니라, AI 등의 기술 발전과 지식자산을 활용한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AI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²⁾나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유효한 공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회」(知財投資・活用戦略の有効な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検討会)³⁾ 등의 논의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로써, 2026년 6월 12일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전략 추진」(이하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이라 한다)이 수립·공개되었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는 지식재산전략의 향후 방향성과 주요 정책이 담겼다. 아래에서는 해당 방향성과 주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소개한 후, 해당 계획에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언급한 내용을 소개한다.

2.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의 주요 내용

1) 지식재산전략의 향후 방향성

일본에서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이 기업의 수익력이나 일본의 성장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나 경제 안보의 중요성 증가 등 경제사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지식자산을 활용해 일본의 성장이 가속될 수 있도록

1) 構想委員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tyousakai/kousou/index.html> (검색일: 2026.7.21.).

2) 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index.html (검색일: 2026.7.21.).

3) 知財投資・活用戦略の有効な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検討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tyousakai/tousi_kentokai/index.html (검색일: 2026.7.21.).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전략적 「창조」, 「보호」 및 「활용」 추진을 기본으로 삼았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은 위와 같은 기본 전략 아래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지식재산전략의 구체적 방향성으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식재산·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 경영이나 국가전략 강화이다.⁴⁾ 둘째, 생성형 AI 등 새로운 시대에 입각한 지식재산 보호이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의 적절한 이·활용 등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원칙·코드」(가칭)를 제정하고, 창작자 등에 대한 대가 환원을 촉진하는 체제 구축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 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가 발생한 때에 신속·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지적하였다. 셋째, 성장 전략과 일체인 국제표준전략 추진이다.⁵⁾ 넷째, 성장 투자에 의한 콘텐츠 전략 추진이다. 구체적으로 2033년까지 해외 시장 규모 20조 엔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민간 투자 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수익력을 견인하는 쿼터팬의 해외 전개 강화이다. 2033년까지 해외 전개 규모 50조 엔 이상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콘텐츠 기반 지역 활성화 거점에서의 사업을 심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내수 소비를 통한 일본 팬층 형성과 수출 확대 목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 지식재산전략의 중요 정책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2025년에 이어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등의 관점별로 중요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가) 지식재산의 「창조」

지식재산의 「창조」와 관련해서는 ① 지식재산·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한 가치 창조, ② AI와 지식재산권, ③ 창조 인재 강화·다양성 실현 관점에서 현황 분석에 기초한 쟁점과 관련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아래에서 ① 내지 ③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의 경우 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비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미국에 견주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지식재산·무형자산 경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 지식재산·무형자산에 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것 등의 문제가 있다. 이로부터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경영진의 관여, 성장 투자에 대한 사고방식, 지표 활용 등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 및 경영 실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그 해결방안을 정리하고,⁶⁾ 기업의 지속적인 가치 창조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

4) ① 일본 성장전략의 17개 전략 분야에서 지식재산 랜드마크케이프를 활용한 승리 전략 도출이나 집중적인 지식재산 투자 추진, ②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영 실천이나 기술 보호와 활용, 국제표준전략을 위한 오픈 클로즈 전략 추진, ③ 기업 경영진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향상 등을 강조하였다.

5) 일본성장전략회의(「새로운 국제표준전략」에 근거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설치)가 선정한 17개 전략 분야의 민간 투자 로드맵에 주요·시장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화를 내재화하고, 성장 전략과 일체적으로 국제표준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6) 최고 경영진(CxO)의 역할, 성장 투자에 대한 사고방식, 경영 인재의 육성, 지표 활용 등을 정리한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에 맞추어, 상장기업의 이사회·경영진에 지식재산·무형자산 가치의 본질을 전달하는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해 이러한 사고방식의 추가적인 보급과 정착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 의의 등을 평가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무형자산에

랜드스케이프 활용을 촉진하고, 일본성장전략 17개 분야에서 승리 전략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②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 규모나 연구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기업의 생성형 AI 이·활용이 해외에 견주어 저조하다는 것, 학습 데이터 취급이나 생성물과 저작권·산업재산권 제도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AI법이나 AI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양립을 염두에 둔 검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⁷⁾ 특히 특허·의장 분야에서의 AI 이용 확대를 토대로 실무상 과제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⁸⁾

덧붙여, 일본 정부는 ③ 연구자나 박사 인재 등의 창조 인재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나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핵심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창조 인재의 양적 확보 및 질적 고도화와 더불어 여성이나 외국인 등 다양성 확보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식재산 「창조」 관점에서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지식재산 창조 교육 실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들의 지식재산 마인드 함양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⁹⁾ 우수한 젊은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대학과의 연계·유치·홍보 활동 등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¹⁰⁾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을 홍보·확산하는 것¹¹⁾을 강조하였다.

나)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① 기술 유출 방지, ② 불법복제물·모방품 대책 강화, ③ 산업재산권 제도·운용 강화, ④ 지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관점에서 현황 분석에 기초한 쟁점과 관련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아래에서 ① 내지 ④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①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고용 유동화나 국제적인 사업 활동 확대 속에서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직면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며,¹²⁾ 연구 성과나 기술 정보가 처음에 생각하지 않은 형태로 이용되는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보고서 등을 통한 자율적 공시 촉진이나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 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공시 방식을 검토한다.

7) 배우나 성우 등의 목소리를 모방한 음성 콘텐츠를 무단으로 생성·공개하는 행위 등이 일정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러한 침해에 관한 불법행위법의 해석·적용 등에 관해 현행법 및 판례 이론을 바탕으로 법적 정리를 검토하고(입법 포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널리 알린다. 또한, 권리자나 이용자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확보를 목표로 하는 원칙·코드를 제정하고, 크리에이터 등에 대한 대가 환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촉진한다. 나아가, 생성형 AI에 의한 요약 서비스와 robots.txt 등의 기술적 조치 간의 관계에 대해 부당한 이용 행위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에이전트 공시 및 robots.txt 준수 등의 조치 방식에 관한 과제를 정리한다.

8) AI 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의장 분야에서의 AI 활용 확대를 고려해 특허·의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과제 등에 대해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특허·의장제도소위원회에서 국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검토를 진행한다.

9) 「지식재산 역량개발 학교 지원사업」 등의 노력을 통해 학생·청년 등이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

10)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의 최상위 대학 졸업생을 포함한 우수한 젊은 인재 확보를 위해, 인턴십 활용 등을 통한 현지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정비와 심사 신속화를 진행한 후 고급 인재 포인트 제도 활용을 포함한 유치 강화 및 기업이나 외국인 고급 인재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를 검토한다.

11) 지식자산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비영리법인,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노하우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홍보·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은 기술 유출 방지를 지식재산 「보호」 관점의 중요 쟁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나 연구 성과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나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의도치 않게 국외로 유출되어 안전보장이나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것, 연구 보안 등 확보에 관한 대처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②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영화 등의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가 국경을 초월해 확대하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물 대응은 민간의 대처만으로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의 국제적 연계나 국제 집행 강화가 중요하기에 민관이 협력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는 소비자를 모방품 구매로 유도하는 「유도형 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개별 이용자에게 최적화되어 표시되므로 권리자가 문제 사안을 파악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게 곤란하며, 궁극적으로 모방품 피해에 그치지 않고 피싱 사기 등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민간과 관계부처 등의 긴밀한 연계나 정보 공유 등을 토대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대책을 강화하는 것,¹²⁾ SNS 등의 유도형 사기 광고를 악용한 모방품 유통이라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SNS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나 국제 연계 등의 대처를 추진하는 것¹³⁾을 요구하였다.

한편, ③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가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침해를 억지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등의 초기 단계부터 선행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한 침해 리스크 저감, 적시·적절한 지식재산 획득 등 지식재산의 사회 확산에 이바지하는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질적·양적 면을 모두 갖춘 지식재산권 창조와 보호,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정비와 침해를 억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사증 제도 등 증거수집절차 충실·강화 방안을 검토한 후,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확대 가능성, 해외 소재 증거에 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하는 것 등¹⁴⁾),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실현하고 공모형 연구비와 관련해서 그 사업 목적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현황 신청·보고 실시¹⁵⁾를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12)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관계된 경찰 상담 수리 건수는 3년 연속 70건을 초과하였고, 검거 사건 수는 2025년 38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13) 불법복제물 등대책관민실무자급연락회의를 통해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 및 공정표」에 근거한 대처를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한다. 또한, 국외 해적판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홍보, 국가별 대책 강화, 단속기관을 포함한 국제 협력·집행 등 강화, 권리자의 권리행사 지원이나 정품 유통 촉진(전송·유통 플랫폼 확대나 번역 인재 육성 지원 포함) 등을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한다.

14) SNS 등 인터넷상 유도형 사기 광고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계된 국내의 주체에 대한 주의 환기나 정보 전달을 추진한다.

15) ①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계된 특허법 등 개정에 관해 판례 분석 등에 기초한 효과 검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침해에 관한 실태 분석 등을 한층 더 심화하고, 손해 회복과 침해자 이익 박탈을 확실하게 하는 민사 구제 조치를 검토해 일정 조치를 마련하는 것, ② 집단적·조직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검토하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16) 공모 신청 시에 선행 기술 조사나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전략 책정 상황을 포함한 신청자의 지식재산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과제 채택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고, 성과 보고 시에도 지식재산에 관한 대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최근 일본에서는 ④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영자원이나 인재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경영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은 지역에 기반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경영전략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효율적인 지원(전주기 지원, 지식재산 경영 지원 인재 육성 등)을 실시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지식재산 침해 받는 예가 눈에 띄는 것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의 침해 억지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도 요청하였다.

다) 지식재산의 「활용」

지식재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① 산학 연계를 통한 사회 확산 추진, ② 스타트업 지원, ③ 새로운 국제표준전략 추진, ④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 정비 관점에서 현황 분석에 기초한 쟁점과 관련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아래에서 ① 내지 ④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 정부는 ① 과학과 비즈니스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대학·국책 연구기관을 포함한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이 대학 경영층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중소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에 관계된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보니 대학 내 지식재산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¹⁷⁾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회 활용 기회 최대화와 자금의 선순환을 목표로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확산과 산학 연계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우수 사례 수집·분석·공표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인재(지식재산 관리 전문가인 「지식재산 전략 프로듀서」의 대학 등에 대한 파견 등), 자금(중소기업·스타트업·대학 등의 외국 출원 비용이나 해외 침해 대책 비용 등 지원), 홍보, 지식재산 활용(매칭 기회 창출 등) 등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으로 산학 연계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②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고 관련 생태계가 확대하는 가운데,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인적·자금적 제약으로 인해 지식재산 전략 책정이나 권리 취득·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충분히 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부터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은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정보 전달, 심사 단계에서의 면접¹⁸⁾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경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덧붙여,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은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③ 새로운 국제표준전략 추진과 ④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③의 배경에는 SI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규제·표준·인증 체계에 대한

17) 예컨대, 일본의 많은 대학에서는 80%가량의 특허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을 사회에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8) 특허청 측이 스타트업에 기반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등에 대하여 심사 단계에서 면접 등을 통해 사업 전략에 따른 원활하고 효과적인 권리취득을 지원한다.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된 것과 2025년에 수립된 「새로운 국제표준전략¹⁹⁾」 등이 있다. ③과 관련해서는 민관 투자 로드맵이나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²⁰⁾에 근거한 성장 전략이나 연구 개발과 연계된 국제표준화 추진, 일본 전체의 국제 표준 활동 파악을 위한 새로운 주요 KPI 설정, 공공조달에서의 규격 활용이나 규제·규칙에서의 표준·인증 활용 촉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④의 배경에는 2025년에 수립된 「데이터 이·활용 제도에 관한 기본방침」²¹⁾과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²²⁾ 등이 있다. ④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이·활용 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토대로 연구나 농업, 의료, 방재 등에서의 데이터 이·활용 환경을 정비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라) 새로운 쿨재팬 전략

일본 정부는 쿨재팬 관련 산업의 해외 전개 규모를 2033년까지 50조 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본 팬층의 비율을 1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콘텐츠와 다른 분야의 연계 강화²³⁾나 지역·업계가 하나 된 해외 전개 모델²⁴⁾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콘텐츠의 해외 시장 규모를 2033년까지 20조 엔으로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콘텐츠 분야 민관 투자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에 기반하여 복수 연도에 걸친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장기·전략적인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성장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3.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과 저작권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중요 정책 등에서 저작권에 관계된 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해당 내용을 소개한다.

1) 지식재산의 창조

지식재산의 「창조」에서는 앞서 소개한 ② AI와 지식재산권, ③ 창조 인재 강화·다양성 실현 부분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19) 知的財産戦略本部, 「新たな国際標準戦略: 国際社会の課題解決に向けた我が国の標準戦略」(2025년 6월 3일).

20) 閣議決定,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計画」(令和8년 3월 27일).

21) データ利活用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基本方針, 「データ利活用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基本方針」(2025년 6월 13일).

22) 제7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6년 3월)에서 AI for Science가 중요한 테마로 설정되었고, AI for Science를 뒷받침하는 연구 데이터의 관리·이용·활용 및 유통 방향 정리가 요구되었다.

23) 관계부처 등과 연계한 콘텐츠 지역재생 거점에서의 대치를 심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콘텐츠를 형상화한 화폐의 발행이나 콘텐츠×음식 등 콘텐츠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외 전개를 추진한다.

24) 예를 들어, 텍스타일 국제 견본시 개최 등 지역의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결집해 일본의 새로운 가치 체계로 구축하고, 공동창출·연계를 통한 해외 진출 모델 및 지역·업계가 하나가 된 해외 전개 모델을 추진한다.

• ② AI와 지식재산권

생성형 AI나 에이전트 AI가 연구 개발, 창작 활동, 사업 활동의 생산성과 창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지식재산 창조 사이클 전반을 가속화하는 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 한편, 생성물에 대한 책임 방식이나 학습 데이터의 취급, 생성물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제도와 관계의 둘러싼 새로운 과제를 초래하는 것 외에, 에이전트 AI 출현 등으로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저작권 등 침해 위험에 대한 크리에이터나 권리자로부터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²⁵⁾ 이러한 현실과 우려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생성형 AI와 이에 관계된 사업자, 크리에이터 간에 라이선스 상황 등의 정보 공유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 당사자 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촉진한다’(단기·중기/문화청·경제산업성),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양립을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성형 AI의 적절한 이·활용 등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원칙·코드」(가칭)를 제정함과 함께 크리에이터 등에 대한 대가 환원을 위한 환경구축을 촉진한다’(단기·중기/내각부(지식재산)·문화청·경제산업성) 등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③ 창조 인재 강화·다양성 실현

전문성을 지닌 창조 인재는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적 존재이다. 저작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지식재산 창조 교육 추진,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의 다양성, 고도의 외국 인재 적극 수용 등을 강조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을 토대로 저작권 제도에 관한 일반적 지식뿐 아니라,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의 움직임이나 Web 3.0 관련 기술 등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의 관계 등을 염두에 두면서, 널리 국민을 위한 강습회나 SNS 등을 통한 저작권에 관한 보급·홍보를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저작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한 효과적인 보급·홍보 활동에 대해 검토한다’(단기·중기/문화청) 등의 구체적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의 「보호」에서는 앞서 소개한 ② 불법복제물·모방품 대책 강화 부분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 ② 불법복제물·모방품 대책 강화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은 일본의 매력 있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린 면이 있지만,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등 침해행위 문제를 심화한 면이 있다. 일반사단법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에 따르면, 일본 콘텐츠(영상·출판·음악·게임)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피해액은 2022년 2.0조 엔에서 2025년 5.7조 엔으로 급

25)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써 「AI와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 생각」(2024년 3월) 등이 공표되었다.

증하였고, 2025년에 처음 조사한 가짜 캐릭터 상품에 의한 피해액은 4.7조 엔으로 추계 되었다. 최근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해외용 불법복제 사이트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 및 공정표」를 공표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도 ‘… 최신 정보의 공유 등을 도모하면서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에 근거한 대처를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함과 함께 공정표는 연도별로 갱신한다’ (단기·중기/내각부·경찰청·총무성·법무성·외무성·문화청·경제산업성), ‘… 침해 콘텐츠를 포함한 해적판·모방품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규범의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계부처·관계기관에 의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단기·중기/경찰청·소비자청·총무성·재무성·문화청·농림수산업성·특허청·경제산업성), ‘AI를 활용한 해적판 검지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에서의 해적판 피해 상황을 조사함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권리행사 자동화에 관해 실용화를 검토한다’ (단기·중기/문화청), ‘… 인터넷상의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국내 권리자가 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지원 대처 충실을 도모한다’ (단기·중기/문화청), ‘해외 해적판 사이트라도 송신행위가 일본의 공중에 대한 것이고, 일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일본의 저작권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토대로, 조기 검거를 위해 권리자단체나 관계부처와 연계한 대처, 국제 수사 공조 등의 틀을 활용한 수사를 추진한다. 더불어 해적판에 의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에 관해 현행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나 조직적범죄처벌법 등의 형사상 규제 적용 관계나 해적판에 관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에 관계된 민사상 청구권의 해석에 관해 주지한다’ (단기·중기/경찰청·법무성·외무성·문화청·경제산업성),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사증 제도 등 증거 수집절차의 충실·강화 방식을 검토한 후,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확대 가능성, 해외 소재 증거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한다’ (단기·중기/내각부·문화청·경제산업성·특허청) 등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3) 새로운 클재팬 전략

「새로운 클재팬 전략과 폴로업」 부분에 기재된 「(2) 콘텐츠 전략 추진」은 저작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3.3조 엔이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석유화학산업과 비슷한 규모였고, 반도체 산업보다 큰 규모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 콘텐츠 산업에는 문제가 있었다.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87.5% 성장한 데 반해, 일본 국내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12.7% 성장하는 데 그친 것이다(엔 기준²⁷⁾). 일본 국내 인구 감소 추세를 생각하면 일시적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이로부터 일본 정부는 확대 추세에 있는 세계 전체 콘텐츠 산업 시장에 주목하고,

26) 2025년 11월에는 도쿄지방법원에서 미국법인 Cloudflare, Inc.에 의한 만화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CDN 서비스 제공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27) 달러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이후 엔저가 계속된 영향으로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 성장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2.2%가 되고, 일본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 성장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이너스가 된다.

2033년까지 일본 콘텐츠의 해외 시장 규모를 20조 엔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① 크리에이터·콘텐츠 산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② 해외 진출 및 세계에 통용되는 콘텐츠 제작·유통 촉진, ③ 크리에이터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내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도 콘텐츠 전략 추진을 강조하고, 콘텐츠 분야 민관 투자 로드맵의 착실한 추진, 콘텐츠와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 플랜, 해외 비즈니스 전개력 향상, 지식재산 다원화나 생성형 AI 이·활용을 둘러싼 상황·과제 등에 대응한 비즈니스 구조 개혁 추진, 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재 강화, 불법복제물 대책 강화,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보고서(2026년 3월)를 바탕으로 레코드 연주·전달권 도입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추진한다’(단기·중기/문화청·관계부처), ‘콘텐츠 전송 플랫폼이나 업로드 사이트 등에서의 저작물 등 이용 현황,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콘텐츠 시장에서의 역할 등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동향이나 국내 경쟁 정책, 디지털 플랫폼 정책, 정보 통신 정책 등 제반 정책을 고려하면서 저작권 분야의 계약 조건 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적절한 대가 환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단기·중기/문화청),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창작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에도 이바지하도록 2026년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한 미관리저작물 재정제도를 착실히 운용한다. …’(단기·중기/문화청), ‘DX 시대의 새로운 계약 방식을 고려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는 「저작권 계약서 작성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작권 계약 매뉴얼」을 적시에 재검토하여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한다’(단기·중기/문화청)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 마치며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의 핵심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전략」이며, 2025년의 「IP 트랜스포메이션」²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은 2025년 계획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AI와 지식재산에 관계된 쟁점이 「이·활용 추진」에서 「규칙 정비·보호」로 넘어갔다. 2025년에는 AI를 이용한 발명의 발명자 정의에 관한 법 개정과 생성형 AI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2026년에는 AI법이 성립·시행되고 논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즉, 어떻게 규칙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원칙·코드를 제정하는 것,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 기초해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분야에 종사·관여하는 이해관계자에게

28) 장예영,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의 개요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2025-2(2025), 4쪽.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동향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표준전략에 관계된 쟁점이 수립에서 17개 전략 분야로의 내재화로 발전하였다. 2025년에는 19년 만에 「새로운 국제표준전략」이 수립되었고, 2026년에는 일본성장전략회의가 선정한 17개 전략 분야(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의 민관 투자 로드맵에 국제표준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명시되었다.

셋째, 콘텐츠 산업에 관계된 쟁점이 체제 정비에서 대규모 성장 투자로 변화되었다. 예컨대, 2025년에는 콘텐츠산업민관협의회 설치와 영화전략기획위원회 출범 등 체제 정비가 주요 내용이었지만, 2026년에는 당초·추경 예산으로 약 589억 엔 이상이 책정되고 성장 투자로서 정책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

넷째, 지식재산 거래 적정화에 관계된 쟁점이 조사에서 지침 조기 책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예컨대, 2025년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노하우 무상 취득 문제를 조사하는 단계였다. 2026년에는 지식재산거래적정화워킹그룹 보고서²⁹⁾를 토대로 지식재산 거래 지침을 조기에 책정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지침이 책정되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해당 지침에 근거해 지식재산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9) 知的財産取引適正化ワーキンググループ, 「知的財産取引適正化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書」(令和8年3月).

참고 자료

- 知的財産推進計画2026,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260612/keikaku_all.pdf.
- 장예영,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의 개요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2025-2(2025).
- https://view.copyright.or.kr:8443/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2101ff188e4a471381aedd1b3e1a06c&convType=img&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 構想委員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tyousakai/kousou/index.html>
- 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index.html
- 知財投資・活用戦略の有効な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検討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tyousakai/tousi_kentokai/index.html
- 知的財産戦略本部, 「新たな国際標準戦略: 国際社会の課題解決に向けた我が国の標準戦略」(2025年6月3日).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chitekizaisan2025/pdf/kokusaisenryaku.pdf>
- 閣議決定,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計画」(令和8年3月27日).
<https://www8.cao.go.jp/cstp/kihonkeikaku/7honbun.pdf>
- データ利活用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基本方針, 「データ利活用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基本方針」(2025年6月13日).
https://www.cas.go.jp/jp/seisaku/digital_gyozakaikaku/pdf/data_houshin_honbun.pdf
- 知的財産取引適正化ワーキンググループ, 「知的財産取引適正化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書」(令和8年3月).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6/mar/260311_chizaiwg_2.pdf